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9월 5일(월) 총 12매		
담당 부서	경제정책과	담 당 자	• 경제정책팀장 전창성 ☎440-3261 • 담당자 윤길호 ☎440-32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13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1조 투입

- 유정복 시장,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발표 -
- 현장소통 건의사항 2,100억 등 3개 분야·10개 과제 추진 -

인천시가 국내외 불안요소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금리·유가·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물경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전담 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외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하며, 총 1조 13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4,159억 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됐던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또, 건의사항 중 남동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先) 수출인증-후(後) 지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요구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분야별로 먼저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402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지역, 문화·예술·관광 등의 일상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5,000억 원(매년 1,250억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공인 특화 대출(연 100억 규모)과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5억), 소공인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3.2억)을 새로이 시행하고,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기본 연 1.5%보다 1%p 높은 2.5%로 상향 지원(6개월간, 41.5억)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 원에서 5,000억 원(추경 80억)을 추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예산을 70억 원 늘려 지원 대상을 올해 3,200개사에서 내년에는 3,5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②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피 및 채용 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재직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드림 사업도 내년 사업비를 올해보다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 2백만 원 인상한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중년 일자리 강화를 위한 공간인 ‘인천 신·신 커뮤니티존’ 조

성, 노인일자리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중 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③ 농어촌·도서지역에 대한 물류·유류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7억 원을 새로 지원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작 등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 15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온 저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④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 관광 및 마이스 분야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관광업계 경영 안정화를 돕고, 4.2억 원을 들여 인천여행업체 150개를 선발해 리스타트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6,7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을 지원한다.

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170세대, 44.2억원)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지원(신규), ▲공공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②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방안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 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③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급식 개선과 생활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 및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학기 학교급식 지원 단가도 약 9.7% 인상했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④ 물가관리 등 생활안정에도 힘쓴다.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

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택시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4.5억원)을 실시해 택시업체간 경쟁 유도과 함께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인천e몰 추석 상품할인 혜택, 귀성길 교통편의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 제도·규제 개선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편한 제도나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8월 현장 소통과정에서 발굴된 개선과제 중 하나인 ‘산단 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조건 완화’는 해당 사업대상 중 팩토리 F&B 사업의 경우 현재 연면적 300㎡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바닥면적 300㎡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청년세대 유입과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제도개선·건의사항 55건은 유관기관 협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요약)

참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요약)

□ 3개분야 10개과제 1조 130억원 반영

구 분	계	신규사업	계속사업*
계	64건 / 10,130억	20건 / 1,134억	44건 / 8,996억
'22년 추경	29건 / 4,159억	9건 / 218억	20건 / 3,941억
'23년 본예산	35건 / 5,971억	11건 / 916억	24건 / 5,055억

* 계속사업은 '22년보다 확대·강화된 사업임

< 현장소통 결과 정책 반영 : 21건 2,097억원 >

- 지난 8월 한달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계, 농어민 등 각계 각층과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 20여회 실시
 - 예산사업 21건 2,097억원 반영 / 제도개선 등 60건 접수 검토중
- ※ (시장님) 경로당, 전통시장, 스타트업파크, 반도체기업 등 방문. 오는 10월까지 「민생소통 대장정」 진행중(동구, 강화군 방문 완료)

□ 주요 내용

1. 민생경제지원 : 40개사업 3,402억원(추경 249억, '23. 3,153억)

- ①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1,283억원)
- ②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1,878억원)
- ③ 농·어촌·도서지역 물류·유통비 등 지원 강화(194억원)
- ④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 강화(47억원)

2. 서민생활안정 : 24개사업 6,728억원(추경 3,911억, '23. 2,817억)

-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2,299억원)
- ②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대응(1,866억원)
- ③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식개선·생활임금 인상(1,025억원)
- ④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관리 및 생활안정(1,538억원)
- 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 대책

3. 제도규제개선 : 규제개선 5건, 건의사항 55건

□ 향후계획

- 제도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등과 협의, 현장소통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 추진

〈분야별 주요 사업〉

① **민생경제지원** : 40개사업 3,402억원(추경 249억원, '23년 3,153억원)

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확대(1,283억원)

□ (소상공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9건 412억원, 추경 66억원, '23년 346억원)

⇒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5천억 지원**(매년 1,250억 규모)

-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1% 상환지원) 6개월간 지원(추경 21억, '23 20.5억)
- ▶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그 동안 소외된 소상공인 특별 대출(추경 8억, '23년 8억)
- * 소상공인 화재알림시설 설치(3.2억/신규, 400개업체/업체당 80만원)

□ (중소기업)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5건 871억원, '22 추경 80억원, '23년 791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매년 1조 5천억 융자**(4년간 6조원 규모)

-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 → 1조 5천억원(추경 80억원, 1,315개사 증)
- ▶ (수출지원 확대) 수출 강화를 위한 지원('22년 62.3억 → '23년 70억, 증 7.7억)
- * '22년도 3,200개사 ⇒ '23년도 3,500개사(증 300개사)

②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 (1,878억원)

□ (청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청년취업 지원·목돈 마련 기회제공 및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1건 316억원, '22 추경 31억원, '23년 285억원)

⇒ **인천형 청년월세 본격 시행 3년간 6,000명 지원**(1인당 20만원, 12개월)

- ▶ (구직·재직 청년 드림 확대) '22년 4.9천명 → '23년 8.4천명(증 3.5천명)
- ▶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창업 지원 확대(추경 12.4억, '23 11.2억)
-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자립을 위한 수당 인상('22. 22억 → '23. 28억)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 자립준비정착금 800만원 → 1,000만원('23년부터)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5년간) 30만원 → 35만원('22. 8월부터)

□ (신중년 · 노인 · 다문화 · 사회복지) 은퇴이후 지역사회적응 공간 마련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4개사업 추경 7억원, '23년 1,554억원)

- ▶ (인천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신중년 대상 커뮤니티 공간 설치·운영 (JST 1층 '23년 19.9억/신규)
- ▶ (노인일자리) 활기찬 노후지원을 위한 확대(1,282억 → '23 1,312억/ 증30억) ('22년 46,051명 → '23년 47,756명 증 1,705명)

③ 농·어촌·도서지역 물류·유류비 등 지원 강화(194억원)

□ (농업인 · 어업인 등) 국제유가 및 비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지원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강화(7건 194억원 추경 78억원 '23년 116억원)

-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비료 가격 상승액의 80%지원('22 추경 25.7억/신규)
- ▶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쌀 농가 택배비 지원(추경 3억원)
- ▶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지원) 구매액의 10% 지원('23년 12억/신규, 약 1,250척)
- ▶ (국가보조항로 제외항로 지원) 1일 생활권 유지/4개 항로(추경 15억/신규)

④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 강화(47억원)

□ (문화예술 · 관광) 코로나로 위축된 예술인 공연 · 창작활동 지원 및 침체된 여행업 활성화 지원('22년 33.7억원 → '23년 47억원)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예술인 및 청년 예술가 기획지원 ('22년 17.4억→ '23 21억 증 3.6억) * 예술표현 활동 지원(127→147건), 청년 예술가 기획지원(33→40건)
- ▶ (문화예술단체 지원) 인천소재 전문예술법인 단체(56개) 지원 ('22년 15.5억→ '23년 20억 증 4.5억)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확대 예정
- ▶ (인천여행업 리스타트 사업화지원) 여행업 지원과 관광객 유치('23년 4.3억/신규)

② 서민생활안정 : 24개사업 6,728억원(추경 3,911억원, '23년 2,817억원)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2,299억원)

□ (주거분야) 취약계층 및 청년 ·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제공 및 기존 임대주택 리모델링 강화(3건 1,185억, 추경 571억, '23년 614억)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확대 5,000세대**(매년 1,000세대, '22~26년)

-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연수(55호), 선학(115호)(추경 44.2억/**신규**)
- ▶ (반지하 등 건축허가 제한 추진)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 지역('22. 9월)
* 기존 거주자 지상층(임대아파트) 이전 유도, 실태 및 거주자 조사(市 + 국토부)

- (취약계층)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어려운 가구 지원 확대, 소외계층 문화이용권 확대, 공공일자리 강화(5건 1,114억, '22 추경 113억원, '23년 1,001억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자 전수조사(9월중 552가구)** 및 조치

- ▶ (시민 안심복지를 위한 수혜 조건 완화) 생계비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22년 179억 → 추경 242억 증 63억)
- ▶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문화 예술프로그램 지원 ('22년 134→ 추경 184억, 증 50억)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지원) 아동학원비 및 운영비 지원 ('23년 1.5억/**신규**/ 8개 시설, 36명 혜택)

②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대응 (1,866억원)

- (코로나19) 격리·입원 환자·가구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2건 1,866억, '22 추경 1,703억원, '23년 163억원)
*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임차인) 코로나로 피해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 감면 ('22년 하반기 88억 /시 69억, 지방공공기관 19억)

③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식개선·생활임금 인상 (1,025억원)

- (급식개선·생활임금) 아동·청소년 급식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식사 제공 및 생활임금 인상* (5건 1,025억원, 추경 5억원, '23년 1,020억원)
* 10,670원 → '23년 11,123원(증 4.3%, 23백여명)
- ▶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1인 7천원 → 8천원, 13.3천명('22.9월 시행)
- ▶ (학교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무상급식 952개교, 약 35만명(1학기 대비 9.7%)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경 4.7억원(**신규**), 1,886명(1인당 연 48만)

④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관리 생활안정(1,538억원)

□ (공공요금) 서민들의 실물경제 악화 피해 최소화

⇒ 하반기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사군구 협력)

*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종량제 봉투

▶ (착한가격 업소 운영 활성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7백 → '23. 75백만원)

* '22.7월 현재 224개소

□ (대중교통) 공공요금 억제에 따른 교통분야 재정지원 확대(5건 1,537억원)

▶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 지원 ('23년 4.5억원/신규) * 우수업체 13개 400백만원, 우수 운수종사자 50명/ 50만원)

▶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장려금 지원 확대('22년 12억 → '23년 14억, 대상 약 10,700여명) * 6년이상 5만원 → 3년(3), 5(5), 7(7)

▶ (준공영제, 도시철도 등) 운행수입보전, 운영손실금 등(추경 1,519억)

③ 제도규제개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규제 선제적 대응

○ 형식적이고 불편한 규제 개혁 : 관련부처 건의 및 협의(5건)

⇒ 구조고도화 사업(팩토리F&B) 면적 규제 개선 등 5건

○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및 건의(55건)

⇒ 지역별 인증기관 확대 등 6건(유관기관)

⇒ 남동 산단내 통근버스 증차 등 49건(내부검토 및 시 관련부서)

6. 향후 추진계획

○ (재정지원) '22년 추경 사업은 조속 실행, '23년 본예산 반영

○ (규제개혁 5건)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규제 등 5건은 중앙부처 개선 협의 및 건의

○ (제도개선 55건) 지역별 인증기관 확대 요청 등 55건은 지속 개선

▶ 앞으로도 기관, 단체, 기업,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임

▶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 등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겠음